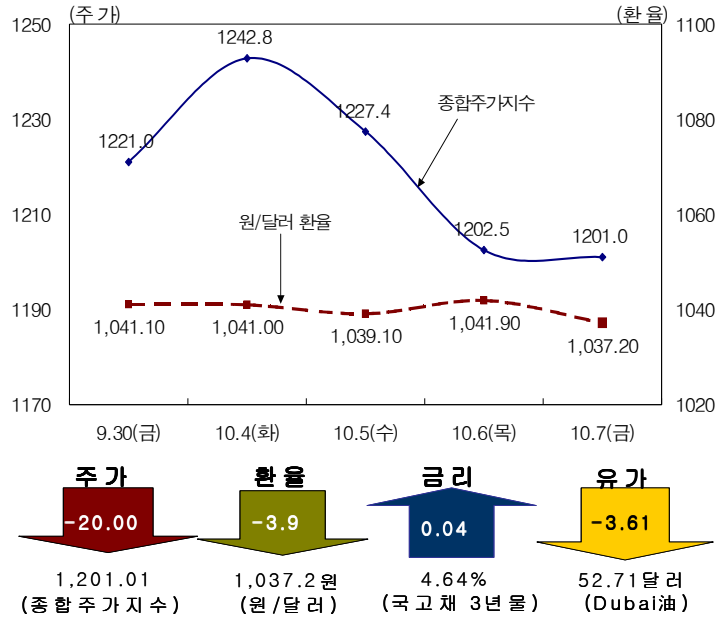


# 韓國經濟週評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30 ~ 10.7)**



**차 례**

<b>주요 경제 현안</b> .....	1
□ 법인세, 그렇게 낮지 않다 .....	1
□ 물가상승률 2%의 허실 .....	10
<b>주간 경제 동향</b> .....	18
□ 실물 부문 : 투자심리 개선세 다소 주춤 .....	18
□ 금융 부문 : 글로벌 달러화 강세 지속 .....	1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지식 산업팀 : 이 부 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  
 □ 지식 산업팀 : 이 상 우 선임연구원 (3669-4014, leesw@hri.co.kr)

## Executive Summary

### □ 법인세, 그렇게 낮지 않다

최근 세수 부족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 안전망 구축, 자주 국방 등 세수 확충과 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세수 확충을 위해 법인세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은 현재 국내 법인세 부담이 선진국보다 높고 투자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수 확충 효과보다는 경기 활성화 제약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2002년 3.6%)은 OECD 평균(2002년 3.4%)을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 각국들은 각종 감세 정책을 도입하여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고 있으나 한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 GDP 대비 법인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은 21.5%(2001년)로 프랑스 19.3%, 캐나다 11.2%, 미국 8.4%보다 높고 독일보다는 무려 19.9%p(2002년)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영업이익 기준 평균 유효 법인세율(법인세/영업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기준 평균 유효 법인세율(법인세/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부정적인 영향은 첫째, 국제 조세 경쟁력 약화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유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우려된다. 둘째, 기업의 재무 구조 악화에 따르는 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무리한 세율 인상보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여 세원을 확충하고, 정부 효율성을 높여 정부 규모의 비합리적인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부득이 법인세율을 올린다하더라도 준조세 축소, 규제완화 등을 통해 법인 세율 인상이 경기 중립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 물가상승률 2%의 허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5년 6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다.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대에 머무르고 있는 주된 이유는 원화가치 상승, 중국 저가 제품의 대규모 유입, 내수 부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제는 2%대의 물가상승률이 우리의 경제여건상 낮은 수준이라고 단언하기 힘들다는데 있다. 우선 물가의 상승속도가 국민소득 증가세보다 빠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을 넘어선 2004년 3/4분기 이후 그 차이가 4분기 연속 벌어지면서 3%p까지 확대되었다. 고유가 현상으로 체감물가와 지표물가간의 괴리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생활물가지수는 8월 2.8% 상승에 그쳤으나 9월 들어 휘발유와 등유 가격이 오르면서 3.8%로 상승폭이 커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의 차이도 0.9%p에서 1.1%p로 확대되었다. 또한 체감물가에 가장 근접한 구입빈도지수(월 1회 이상 구입품목 기준)도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과의 차이가 2.1%p까지 벌어졌다. 이는 구입빈도지수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어서기 시작한 2004년 6월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의 주요 경쟁 국가들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였을 때 물가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물가지수나 구입빈도별지수 등 체감물가에 근접한 보조지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체감물가와 지표상의 물가간의 괴리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제에 대한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용인상형 물가상승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비용 절감책이 필요하다. 지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생산성제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지식기반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유가 부담을 덜 받는 산업구조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법인세, 그렇게 낮지 않다

1. 정부 법인세 인상론

○ (법인세 인상론) 정부는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구축, 자주 국방, 대형 국책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한 세수 확충안으로 법인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음

- (정부의 세수 부족 규모) 2004년에는 4.3조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되었으며, 2005년 4.6조 원(전망치)의 세수 결손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 세수 부족 현황 >

(단위: 조 원)

구분	2004년			2005년	
	예산	실적	부족액	예산	부족액(전망치)
총국세	122.1	117.8	4.3	130.6	4.6

자료: 재정경제부 세제실, 「최근의 세제 현황 설명회 자료」, 2005. 9. 29.

- (법인세 인상론의 근거) 정부 여당에서는 경쟁국이나 선진국들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세수를 확충 시킴으로써 정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경쟁국이나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 한국의 법인세율은 현행 지방세 포함 27.7%로 OECD 평균 28.4%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나 대만 25%, 싱가포르 20%, 홍콩 17.5%보다 높은 수준임<sup>1)</sup>

< 각국의 법인세율 >

구분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OECD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법인세율	25	35	33.3	30	30	28.4	30	25	20	17.5
지방세포함	27.7	40.8	35.4	40.9	30	-	33	25	20	17.5

자료: 재경부 세제실.

1) 정부 의견에 의하면 싱가포르, 홍콩은 도시 국가 또는 자치체, 대만의 경우는 지방세를 제외하면 동일한 법인세율이라는 점에서 경쟁국 또는 선진국의 범주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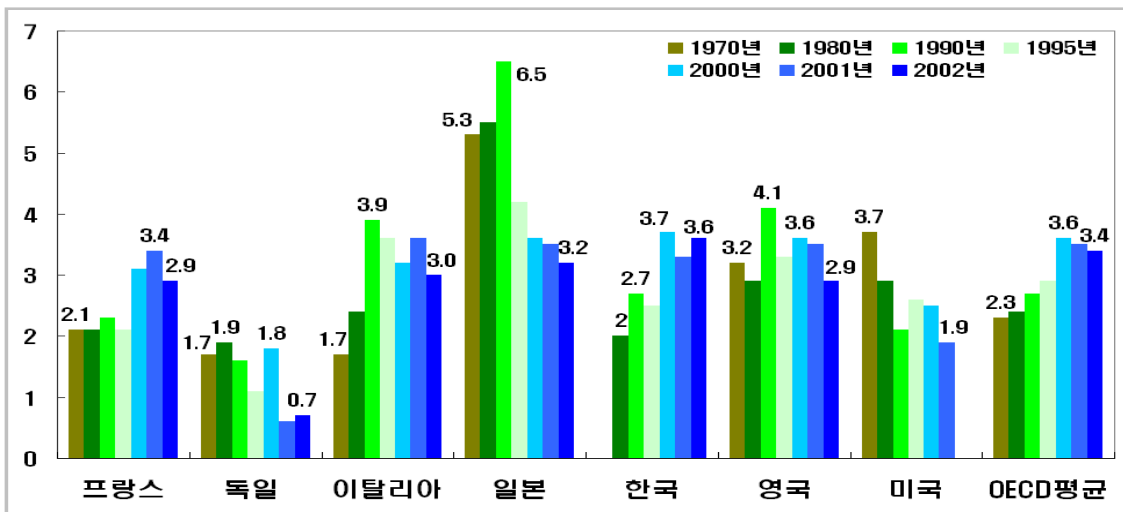
## 2. 법인세 부담 국제 비교

- (질적으로는 높은 법인세율) 정부는 양적이고 표면적인 법인세율을 들어 비교국들보다 법인의 세 부담이 낮다고는 하나 GDP 대비 법인세율, 영업 잉여 대비 법인세율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동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높은 수준임
- (외국보다 큰 법인세 부담) 한국은 GDP 대비 법인의 세 부담 뿐 아니라 평균유효법인세율 등 실질적인 법인의 세 부담이 선진국과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음
  - (높은 GDP 대비 법인의 세 부담) GDP 대비 법인의 세 부담이 선진국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OECD 평균: 1970년대 이후 2000년까지 법인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01년부터 하락하고 있음
    - 미국: 1970년 3.7%에서 2000년까지 2%대를 유지하다가 2001년에는 1.9%까지 하락함
    - 일본: 1970년 5.3%에서 1990년까지 OECD 최고 수준인 6.5%까지 상승하다가 1995년 4.2%, 2000년 3.7%, 2002년에는 3.2%까지 하락함
    - 기타 선진국: 영국, 독일 등 기타 선진국들 또한 최근 GDP 대비 법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있음
    - 한국: 1980년 2.0%에서 2000년 3.7%까지 증가하였으며 2001년에는 잠시 3.3%까지 하락하였으나 2002년 다시 3.6%로 상승하여, 세계적인 법인의 세 부담 하락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 (높은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부담) 한국의 GDP 대비 법인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임
    - GDP 대비 영업이익 비율: 한국의 GDP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2001년 14.3%로 미국 20.7%, 이탈리아 23.1%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독일 18.1%, 영국 16.3%, 프랑스 16.2%에 비해서도 낮음

-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 반면 한국의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은 1998년 20.4%에서 1999년 17.3%로 감소하였으나 2001년에 21.5%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프랑스 19.3%, 캐나다 11.2% 보다 높은 수준이며 독일 보다는 무려 19.9%p 높은 수준임

< OECD 각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추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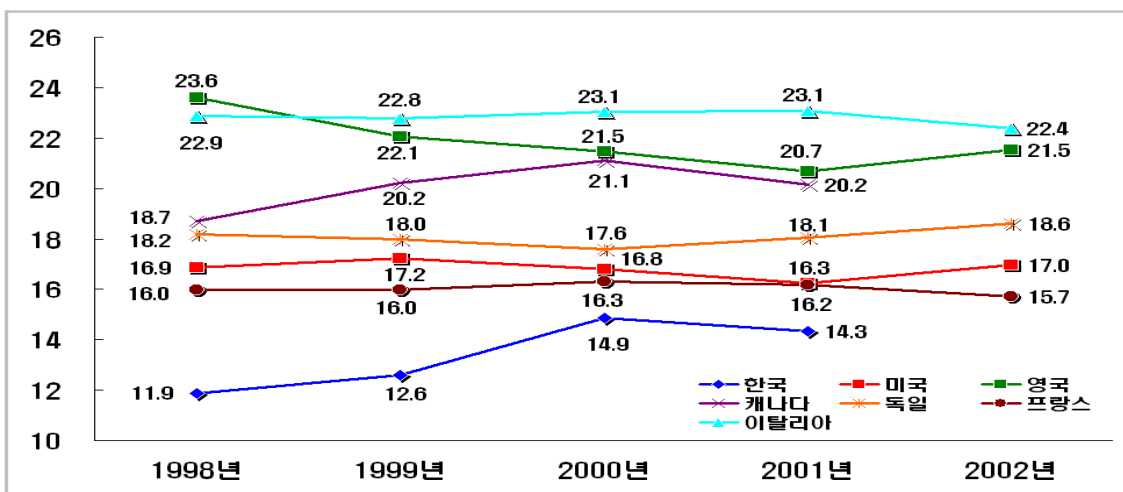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4.

주: 지방세 포함.

< GDP 대비 영업이익 비율 국제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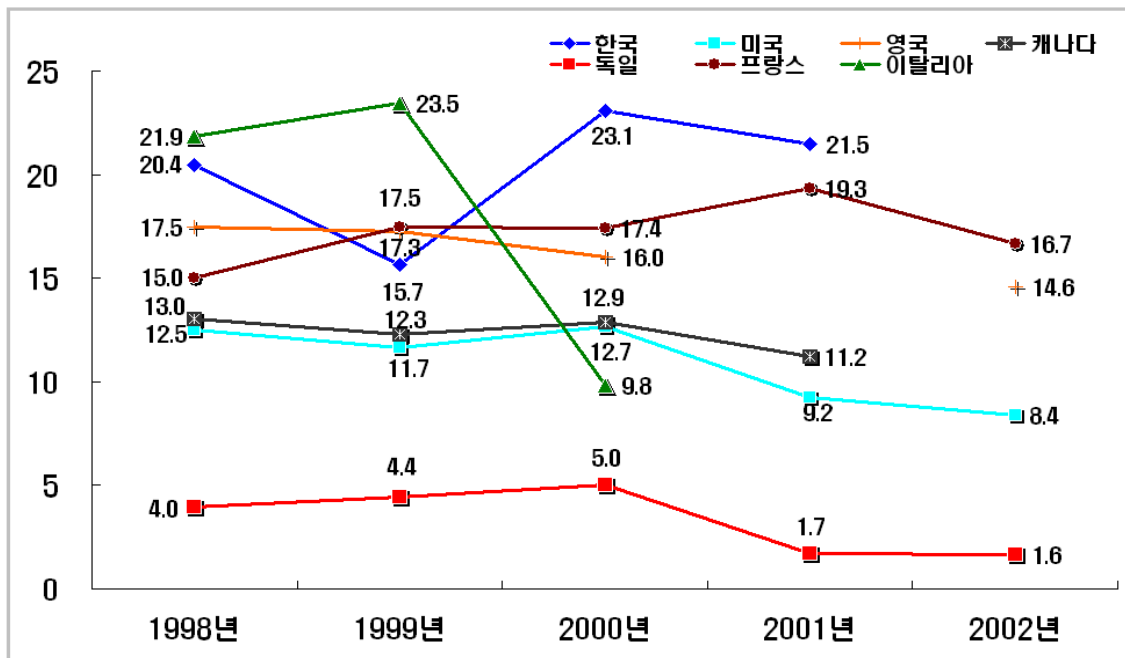
(%)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04; IBFD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European Tax Handbook*, 각 년도;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각 년도.

<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 국제 비교 >

(%)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04; IBFD, *European Tax Handbook*, 각 년도;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각 년도.

- (동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높은 평균 유효 법인세율)<sup>2)</sup> 한국 법인기업의 평균 유효 법인세율은 영업이익 기준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기준 모두 대만, 싱가포르 등 특정 동아시아국가들보다 높음
  - 영업이익 기준 평균 유효 법인세율: 한국의 영업이익 기준 평균 유효 법인세율은 2003년 기준 24.25%였으나 대만 10.95, 싱가포르 14.87%, 태국 17.86%, 홍콩 19.05%로 4%p 이상 높게 나타남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기준 평균 유효 법인세율: 한국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은 2003년 기준 26.93%이나 대만 12.74, 싱가포르 17.43%, 태국 20.45%, 홍콩 20.82%보다 6%p 이상 높은 수준임

2) 박기백·김진(2004. 12)의 기업 미시자료에 의한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에 의하면 G7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어 선진국들과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기백·김진, 「법인세 부담 연구-미시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4년 12월 참조.

< 한국과 동아시아 각국의 평균 유효 법인세율 비교 >

(%)

구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영업이익 기준	대만	18.38	14.39	13.28	13.01	10.95
	싱가포르	23.82	20.60	24.11	21.17	14.87
	태국	22.78	14.56	15.91	18.48	17.86
	홍콩	14.71	14.62	16.48	16.92	19.05
	한국	18.00	23.83	24.13	28.63	24.25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기준	대만	24.31	16.78	16.10	15.72	12.74
	싱가포르	24.02	21.01	22.93	24.43	17.43
	태국	28.74	22.15	22.99	24.31	20.45
	홍콩	11.94	14.03	18.83	18.29	20.82
	한국	31.67	24.37	27.02	25.89	26.93

자료: 박기백·김진, 「법인세 부담 연구-미시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4. 12.

### 3. 세계적인 법인세 변화 추세

○ (세계적인 법인세 감세 추세)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 각국들은 각종 감세 정책을 도입, ‘감세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 전략’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 (미국) 2003년 법인세를 10년간 164억 달러 줄이는 감세안을 통과시켜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2003년 35%에서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32%까지 낮추기로 함
- (일본) 버블붕괴로 인한 장기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1998년 법인세율을 최고 34.5%에서 30%로 낮추었을 뿐 아니라 2002년에는 중소기업 법인세 310억 엔 감면, 2003년에는 연구개발 관련 세제 개혁으로 총 1조 4,170억 엔 규모의 법인세를 감세하였음
- (기타) 싱가포르,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인세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선진 각국의 법인세 감세 추세 >

구분	법인세 감세	기타 감세	비고
미국	- 2003년 35%→ 2005년 34%(2009년 32%)		- 단계적 감세 - 규모: 10년간 164억 달러
일본	- 1998년 35.4%→32%	- 연구개발 세제 개혁 등 1조 4,170억 엔 감세	- 항구적 감세 조치 - 중소기업 법인세 총 310 억 엔 감세(2002년)
영국	- 1997년 33%→31% - 1999년 31%→30%		
독일	- 2004년 26.5%→25%		
프랑스		- 부가세: 2002년 10%→ 6%, 2003년 폐지	
아일랜드	- 2003년 24%→12.5%		
캐나다	- 2000년 28%→21%		
싱가포르	- 2000년 24.5%→20%		

자료: 각종 보도 자료.

4. 법인세 인상의 영향

○ (법인세 인상의 영향) 법인세 인상에 의한 세수 증대로 국가채무 증가세 둔화 등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경기침체 지속 상황 하에서 민간투자 감소에 의한 중장기 경제성장잠재력 하락, 국제 조세경쟁력 하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긍정적인 영향) 법인세 인상으로 재정 균형 회복 및 국가채무의 증가세 둔화, 민간 소비 및 투자 보완, 소득재분배 효과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됨

· 국채발행 억제를 통한 국가채무<sup>3)</sup> 증가세 둔화: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sup>4)</sup>는 재정 균형 회복 뿐 아니라 국채 발행 증가를 다소 억제할 수 있어, 국가채무의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음

3)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1997년 60.3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2004년에는 203.1조 원으로 7년간 약 3.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2009년에는 325.8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4)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2004년 4.3조 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에도 예산대비 4.6조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전망이다.

- **민간 소비 및 투자 보완<sup>5)</sup>**: 세수 증대에 따르는 정부 지출 확대는 민간 소비 및 투자 보완을 통해 경기 회복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
  - **소득재분배 효과**: 증대된 세수를 저소득층에 직접 지출하거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대됨
- (부정적인 영향) 한편 법인세 인상은 민간투자 감소에 의한 경제성장잠재력 하락, 국제 조세 경쟁력 하락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임
- **경제성장잠재력 하락**: OECD (1997) 에 의하면 명목 GDP 1%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의 항구적 감소와 세수감소분만큼의 경상이전지출을 축소하면 중장기 경제성장률은 0.03~0.09% (2004년 GDP 778조 3,322억 원 기준 2,335억 원~7,005억 원) 상승효과가 있으나<sup>6)</sup>, 만약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이러한 중장기 경제성장효과는 상실될 것임
  - **국제 조세 경쟁력 하락**: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외국인투자 유치에 애로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통한 경제성장잠재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5. 대응방안

- (경제 변화 예상 능력 확충) 정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최근 세수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성장률, 환율 등 경제 변화에 대한 예상 능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 변화 예상 능력의 확충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5) 단 정부 지출 확대는 상대적으로 민간 투자를 축소시키는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 Out)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최근에는 정부 지출보다 민간 투자 촉진에 의한 경기활성화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6) Roeger Werner and Jan in't Veld, "Effects of Taxation in QUEST II," in *Tax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OECD, Paris, 1997.

- (중립적 세수확충 정책 필요) 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잠재력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소득재분배와 경제성장잠재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경기 중립적인 세수 확충정책이 필요함
  - (기업 환경 개선) 법인세를 인상하더라도 준조세와 같은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준조세 정비,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제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임
    - **준조세 정비:** 준조세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2004년에는 준조세 규모가 10조 415억 원에 달해 정부의 세수 부족분 4.3조 원의 2배 이상 규모에 달하고 있어 준조세에 대한 포괄적인 정비를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률을 낮추어 투자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각종 규제 완화:** 출자총액제한,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에게 투자 활력을 주고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 (조세 징수시스템 재확립) 정부의 불납결손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규모 또한 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초과하고 있어, 현행 조세 징수시스템의 재확립을 통해 부족한 세수분의 확충 및 기업과 국민의 세수 부담 경감을 꾀해야 함
    - **불납결손액 규모:** 납세자의 재력 부족, 거주지 불확실 등의 이유로 정부가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은 2004년에 7조 5,000억 원(2003년 6조 5,379억 원 대비 14.7% 증가)에 이룸
    - **조세 징수시스템 정비 필요:** 이는 2004년 세수 부족분의 약 1.7배에 가까운 규모로 현행 조세 징수시스템의 정비 및 재확립이 필요함
- (정부규모 축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고령화 저출산 현상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규모 축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공공부문 개혁)** 장기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재정적자 확대 및 국가 채무의 급팽창을 경험한 일본은 코이즈미 총리 집권 이후 지속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정부규모를 축소,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부조직 개편:** 2001년 1부 22성청에서 1부 12청성, 128개국에서 96개국, 1,166개과에서 997개과로 축소함
  - **인원 및 인건비 감축:**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중앙관청에서 3만 3,230명의 인원을 감축할 뿐 아니라 우정공사 민영화로 28만 명이 민간인 신분이 되며, 2005년 인건비 0.36% 감소를 비롯하여 2015년까지 GDP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임
  - 기타 공무원 급여 체계 개혁,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등 각종 개혁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음
  
- **(한국은 정부 규모 확대)** 한국은 저성장 기조의 지속 및 고령화등 사회 구조가 급변하면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2만 2,422명 증가하는 등 정부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정부부문의 개혁이 시급함
  - **공무원 인건비 증가:** 2003년 15조 7,599조 원이었던 공무원 인건비가 정부 조직 확대 등으로 2005년에는 19조 291억 원으로 20.7%나 증가하였음
  - **공무원 연금 적자 증가:** 2005년에 7,330억 원에서 2010년에는 2조 7,93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건정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공기업 민영화 부진,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 현재 정부규모가 유지 또는 약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공공부문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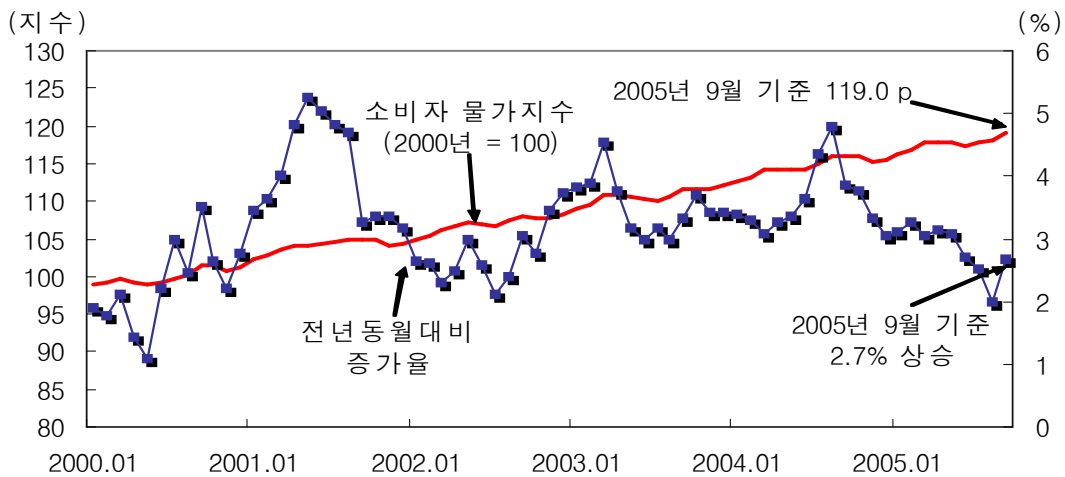
□ 물가상승률 2%의 허실

1. 물가 움직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5년 6월 이후 9월까지 4개월 연속 2%대의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05년 9월 119.0p로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여 전월(8월) 2.0% 상승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컸으나 여전히 2%대 상승에 머무르고 있음

<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및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



자료 : 통계청.

○ 두바이유價가 배럴당 50달러를 넘는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는 여건에서도 소비자물가가 2% 상승에 머무르고 있는 주된 이유는 원화가치 상승에 의한 수입물가 상승압력의 흡수, 중국 저가제품 유입 증대, 내수 부진 때문임

- 환율 흡수 : 환율 절상으로 수입 물가지수(원화표시)가 하락하여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상승폭이 제한되었음

·2000년 이후 환율 절상폭이 컸던 세 시기의 수입 물가지수(원화 기준, 달러 기준)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를 보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지수 안정에 크게 기여

·원/달러 환율이 13.1% 절상된 2004년 5월 ~ 2005 5월 사이에 달러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4.3% 상승했으나, 원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6.4% 하락

·이와 비슷한 현상은 2002년 3월 ~ 7월, 2003년 3월 ~ 8월에도 발생

·원화 절상으로 인한 원화표시 수입 물가지수의 하락은 최종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압력을 상쇄하는 효과로 작용

< 원화 절상기의 물가지수 움직임 >

기간		2002.3 ~ 2002.7	2003.3 ~ 2003.9	2004.5 ~ 2005.5
원/달러 환율		10.4% 절상 1,325.9 → 1,188	8.3% 절상 1,254.6 → 1,150.1	13.1% 절상 1,160.1 → 1,007.7
수입 물가지수	달러 기준	4.1% 상승 85.76 → 89.24	2.1% 하락 94.55 → 92.56	14.3% 상승 106.05 → 121.24
	원화 기준	6.8% 하락 100.36 → 93.58	7.5% 하락 103.21 → 95.50	6.4% 하락 110.45 → 107.52
소비자 물가지수		0.6% 상승 106.1 → 106.7	0.6% 상승 110.9 → 111.6	3.1% 상승 114.2 → 117.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원/달러 환율은 증가기준 말일 자료.

- 중국 저가 제품 대규모 유입 : 수입비중이 높은 중국 제품의 톤당 가격은 주요 수입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중 중국 수입품의 비중은 2000년 8%에서 2005년 1~8월 현재 15%로 급증

·특히 소비자물가와 관련이 높은 경공업 제품의 경우 2005년 1~8월 현재 수입액의 31%를 차지

·반면 우리나라 10대 수입 대상국<sup>7)</sup>에서 중국 제품의 톤당 가격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낮은 637달러에 불과

< 주요 수입대상국 수입품의 톤당 가격 >

(단위 : 달러)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2000년	톤당 금액	2,430	290	1,505	3,673	5,418	232	648
	수입 비중	20%(1위)	8%(3위)	18%(2위)	3%(10위)	3%(9위)	3%(6위)	3%(7위)
2005년	톤당 금액	2,275	637	1,819	10,356	4,554	257	638
	수입 비중	19%(1위)	15%(2위)	12%(3위)	4%(5위)	3%(8위)	3%(9위)	2%(10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1) 2005년은 1~8월 까지 누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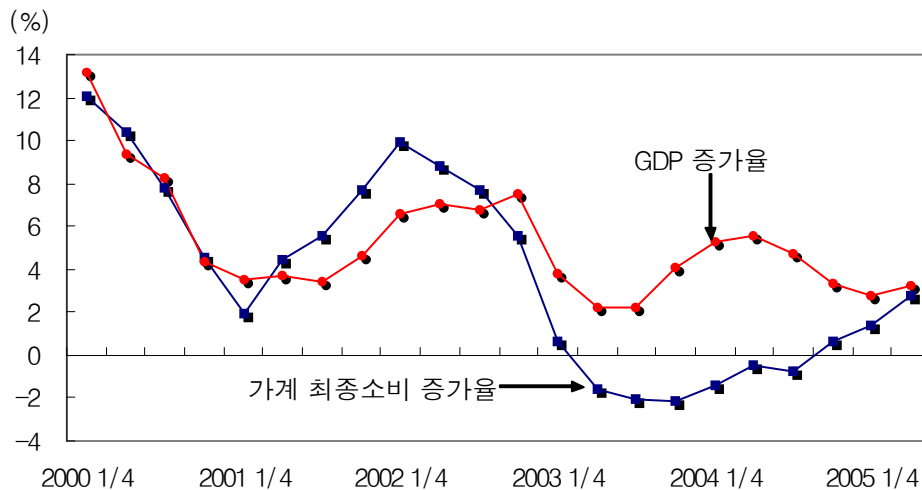
2) 톤당 금액은 명목 기준

3)수입비중은 금액기준.

7) 2005년 1~8월간 우리나라 10대 수입대상국은 일본,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호주, 아랍에미리트 연합,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이며, 여기서는 천연자원 수입비중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호주를 제외하였음.

- 소비 부진 : 가계부문 최종 소비지출액 증가율이 2002년 4/4분기 이후 2005년 2/4분기 까지 11분기 연속 GDP 증가율을 하회
  - 특히 2003년 2/4분기부터 2004년 3/4분기까지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음
  - 2004년 4/4분기부터 가계 최종소비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으나 액수로 보면 2년 반 전인 2002년 4/4분기의 89조원 수준(2000년 가격 기준)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가계 최종소비 증가율과 GDP 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2000년 가격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 2%대 물가상승률, 과연 낮은 수준인가?

○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물가상승률) 2004년 3/4 이후 4분기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sup>8)</sup> 증가율을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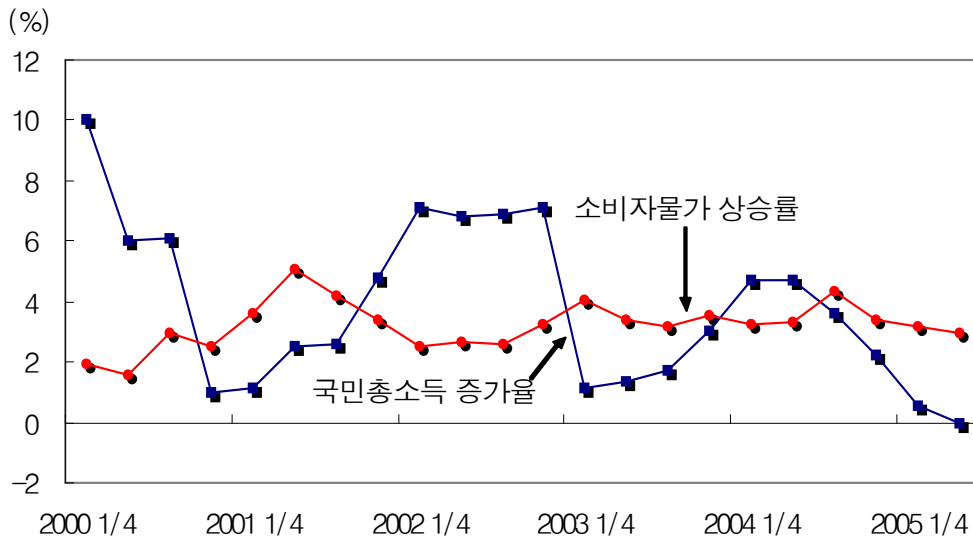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민총소득 증가율을 넘어선 총 세 번의 기간 중 차이가 가장 크게 확대된 상태임
- 2004년 3/4분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민총소득 증가율과의 차이는 4분기 연속 벌어져서 2005년 2/4분기에 3%p까지 확대

8) GNI란 생산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지표로,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과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한 것임. 이상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인용.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하락하여 2005년 2/4분기 3%까지 떨어졌으나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2005년 2/4분기 0%에 그쳤기 때문

- 소득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것은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함

< 소비자물가 증가율과 국민총소득 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2000년 가격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00년 이후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국민총소득 증가율을 초과한 기간 >

(단위 : %, %p)

	2000 4/4 ~ 2001 3/4				2003 1/4 ~ 2003 4/4				2004 3/4 ~ 2005 2/4			
	2000 4/4	2001 1/4	2001 2/4	2001 3/4	2003 1/4	2003 2/4	2003 3/4	2003 4/4	2004 3/4	2005 1/4	2005 2/4	2005 3/4
소비자물가 상승률 (A)	2.5	3.6	5.0	4.2	4.1	3.4	3.2	3.5	4.3	3.4	3.2	3.0
국민총소득 증가율 (B)	1.0	1.1	2.5	2.6	1.2	1.4	1.8	3.1	3.6	2.3	0.5	0.0
차이 (A - B)	1.5	2.5	2.5	1.6	2.9	2.0	1.4	0.5	0.7	1.2	2.7	3.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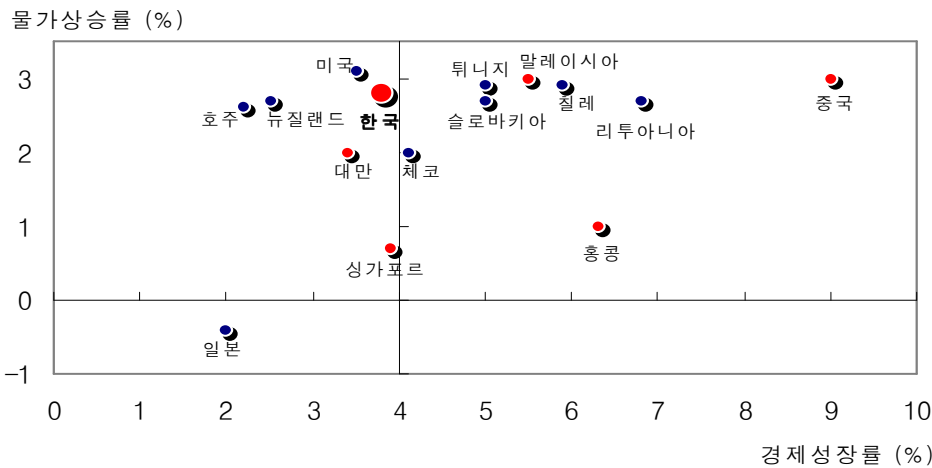
주 :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2000년 가격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외국 물가수준과 비교)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물가상승률은 낮은 편이 아님



- IMF 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5년 경제성장률 3.8%, 물가상승률 2.8%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반면 물가상승률 2.8%에 근접한 다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대체적으로 4%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아시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는 물가상승률 3%-경제성장률 5.5%, 싱가포르는 물가상승률 0.7%-경제성장률 3.9%, 중국(홍콩 제외)은 물가상승률 3%-경제성장률 9% 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보다 물가수준이 오히려 안정될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과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비교 >



자료 : IMF  
 주 : IMF의 2005년 예상치.

○ (체감물가 강세 지속) 물가가 유류의 가격변동에 여전히 큰 영향을 받으면서 체감물가와 지표물가간의 괴리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생활 물가지수는 2005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2.8%에서 9월 3.8%로 상승폭이 커졌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의 차이도 0.9%p에서 1.1%p로 확대
- 9월 들어 휘발유와 등유 가격의 인상률이 각각 전월 대비 3.8%, 3.0%로 상승하면서 생활물가지수 상승을 주도
- 생활 물가지수 상승에 대한 휘발유와 등유의 기여도는 구성 품목 중 전월 대비 1위와 5위, 전년 동월 대비 1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어 생활물가가 유류의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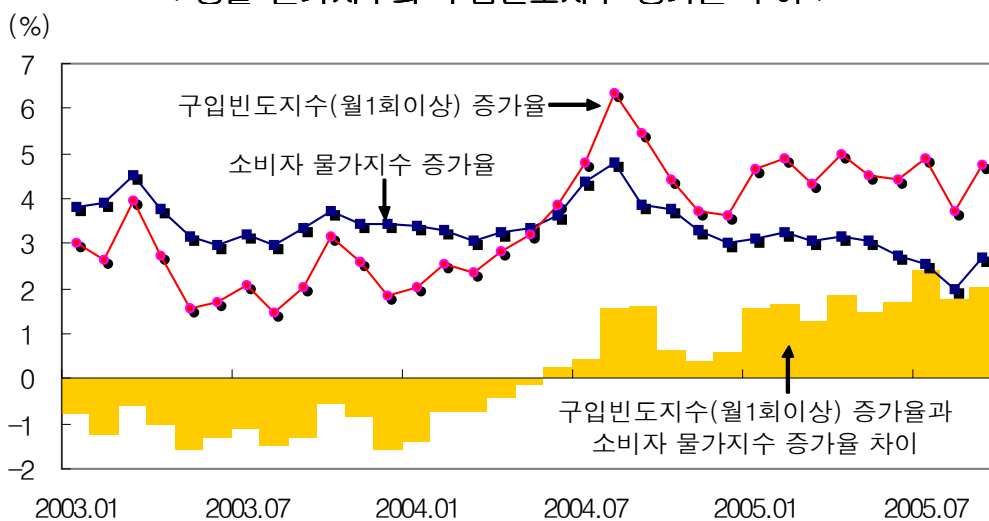
< 생활물가지수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품목 1~5위 >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주요품목	가중치 (%)	상승률 (%)	기여도 (%p)	주요품목	가중치 (%)	상승률 (%)	기여도 (%p)
<b>휘발유</b>	<b>7.9</b>	<b>3.8</b>	<b>0.3</b>	<b>휘발유</b>	<b>7.9</b>	<b>10.1</b>	<b>0.8</b>
배추	0.5	47.5	0.2	담배(국산)	1.7	27.8	0.5
시금치	0.1	132.6	0.2	<b>등유</b>	<b>2.4</b>	<b>15.7</b>	<b>0.4</b>
무	0.3	29.3	0.1	도시가스	3.6	5.2	0.2
<b>등유</b>	<b>2.4</b>	<b>3.0</b>	<b>0.1</b>	사과	0.6	33.3	0.2

주 : 1) 2005년 9월 기준  
 2) 순서는 생활물가지수 상승에 대한 기여도 순.

- 지표 성격상 체감물가에 가장 근접한 구입빈도별지수(월 1회 이상 구입품목 기준)도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과의 차이가 2.1%p로 확대
- 구입빈도별지수(월 1회 이상 구입품목으로 구성) 증가율은 2004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 두 지표는 2005년 7월 2.4%p까지 벌어져 처음으로 2%p를 넘어섰으며 2005년 9월 다시 2.1%p로 확대되어 체감물가와 지표물가간의 괴리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 생활 물가지수와 구입빈도지수 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1) 구입빈도지수는 월 1회 이상 구입한 품목으로 구성  
 2)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임.

###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2%대 상승률이라는 절대적 수치로 단순히 해석하기가 힘든 상황임

- 비용 상승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한국 경제의 역량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때 대외 여건이 변할 경우 물가 상승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함
  - 유가 급등과 동시에 이루어진 원화 가치의 절상, 중국 저가 제품의 대량 유입 등 외적인 요인들이 현재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인한 달러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 달러화가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미 달러의 약세가 지속될 경우 산유국이 결제 통화를 바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환율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임
  - 이에 더해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중국 수입 제품의 가격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고, 위안화의 추가적인 평가절상 가능성이 높아 중국 저가제품에 의한 중국 효과는 장기간 지속되지 못할 것임
-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소비자물가가 더 빨리 상승하고 있어 실질 구매력은 계속 감소하는 상황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4년 3/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국민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5년 2/4분기에 3.0%p까지 벌어져 2000년 이후 그 차이가 가장 크게 확대되었음
- 고유가의 장기화로 체감물가가 유류가격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상황이 계속 되는 한편, 체감물가와 지표물가 사이에 괴리현상이 지속되면서 물가가 경제 상황을 설명해 주는 변수가 아니라 오히려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 아님
  -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의 주요 경쟁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대응 방안) 체감물가에 근접한 보조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의 착시현상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인 비용 절감 방안 마련하는 한편 지식·문화 산업 육성으로 고유가와 같은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배양해 나가야 함

- **보조지표 개발 및 활용** : 체감물가에 보다 근접한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물가관리시 생활물가지수나 구입빈도별지수 등 체감물가와 연관성이 높은 보조지표를 적극 활용해야 함

·현재 물가관리의 기준 지표인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 품목에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것으로 체감물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경제의 착시현상을 유발

- **비용 절감책 마련** : 비용견인(Cost Push) 물가상승 성격이 강하므로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중장기적으로 비용 요인을 줄이고 효율성 제고해 나가야 함

·생산성 제고 : 한국의 시간당 생산성은 미국의 40%에 불과하며,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제조업 부문의 절반수준이어서 지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절실<sup>9)</sup>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우리나라의 석유소비 효율은 GDP 1억 달러당 하루 335배럴로 OECD 평균 수준인 149배럴의 두 배가 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의 176배럴을 크게 상회<sup>10)</sup>

- **문화·지식기반 산업 육성** : 비용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의존도가 낮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육성책 필요함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은 2002년부터 국내총생산의 50%를 넘어서기 시작했으나 문화콘텐츠 개발이나 컨설팅 등 축적된 지식을 상품화하는 능력은 시작 단계에 불과

9)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2005, 2005.10.5

10) 대한석유협회.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투자 심리 개선세 다소 주춤

○ 10월 BSI(전국경제인연합회) 경기 전망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넘어선 110.2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으나, 9월의 111.4보다 1.2p가 하락하며 기업들의 투자 심리 개선 속도가 다소 약화됨

- 9월 실적 BSI는 추석 특수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100을 넘어서지 못한 99.2를 기록하고 있어, 기업들은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면서도 현재의 경영 여건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관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부문별 전망 BSI를 살펴보면, 투자와 자금 사정은 각각 102.8과 105.3를 기록하여 기업의 투자 회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나, 고용 BSI는 지난 8월에 기준치 100을 하회한 이후 10월에도 98.8로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우세함

○ 기업의 경제 심리가 호전되고 있으나 그 호조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특히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고용 확대와 가계 구매력 확충을 통해 소비 회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3	2004		2005					
			연간	4/4	1/4	2/4	8월	9월	10월	
경기	수요	경제성장률	3.1	4.6	3.3(0.9)	2.7(0.4)	3.3(1.2)	-	-	-
		도소매판매	-1.0	-0.9	-1.4	-1.0	2.7	4.9	-	-
		설비투자추계	-2.3	1.4	0.1	4.0	1.5	-0.9	-	-
		건설수주	22.5	-5.3	28.8	24.8	40.5	18.3	-	-
	공급	수출	19.3	31.0	21.2	12.7	9.0	18.1	18.7	-
		산업생산	5.1	10.4	6.7	3.8	4.0	5.5	-	-
		취업자수(만명)	2,214	2,256	2,273	2,225	2,313	2,285		
		실업률(%)	3.6	3.7	3.6	4.2	3.7	3.6	3.6	3.6
	수입	17.6	25.5	23.6	14.7	15.0	20.5	24.5	-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119	276	74	60	28	-4	-	-	
	무역수지(억\$)	150	294	72	63	62	15	21	-	
물가	소비자물가	3.6	3.6	3.4	3.2	3.0	2.0	2.7	-	
	생활물가	4.1	4.9	5.0	4.7	4.5	2.8	3.8	-	
심리	BSI (전경련)	98.7	82.2	82.2	119.2	105.1	91.7	111.4	<b>110.2</b>	

주 : 경제성장률 ( )안은 전기대비 계절조정 증가율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통계 지표임.

□ 금융 동향 :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 (해외 금융시장)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기대로 시장금리 상승세 지속

- 금리 : 유가 하락 및 일부 경기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댈러스 연준 피셔 총재의 인플레이 우려 발언에 따른 지속적 금리인상 가능성 영향으로 미 시중금리가 소폭 상승함 (미국채 10년물 : 4.32%→4.37%)
- 환율 : 미 9월 ISM 비제조업지수의 부진(전월 65.0→53.3, 예상 60)과 ECB의 금리인상 시사로 유로는 강세를 보였으나, 엔화는 3분기 단칸지수의 예상치 하회(예상 21, 실제 19)로 약보합(\$/€: 1.2026→1.2129, ¥/\$ : 113.51→113.82)

○ (국내 금융시장)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으로 주가 하락

- 주가 : 유가 하락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가 하락 및 외국인 주식 매도세 지속으로 대폭 하락 (전주 말 1,221→1,201, -1.6%)
- 금리 : 한은 총재의 10월 콜금리 동결 시사 발언에도 불구하고, 해외 금리 상승, 국고채 입찰 부진 영향으로 소폭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4.60%→4.64%)
- 환율 : 외국인 주식 순매도,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 유지 (전주 말 1,041.1→1,037.2, -0.4%)

○ (전망) 긍정적인 주가 전망 및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주요 금융 지표 >

		2003	2004	2005					
				1/4	2/4	7	8	9.30	10.7
국내	거래소 주가	810.7	895.9	965.7	1,008.2	1,111.3	1,083.3	1,221.0	<b>1,201.0</b>
	국고채3년(%)	4.82	3.28	3.91	4.02	4.23	4.16	4.60	<b>4.64</b>
	원/달러	1,192.6	1,035.1	1,015.5	1,025.4	1,026.8	1,038.5	1,041.1	<b>1,037.2</b>
해외	DOW	10,454	10,783	10,504	10,275	10,641	10,482	10,569	<b>10,292</b>
	Nikkei	10,677	11,489	11,669	11,584	11,900	12,414	13,574	<b>13,228</b>
	미국채10년(%)	4.26	4.22	4.48	3.91	4.28	4.01	4.32	<b>4.37</b>
	일국채10년(%)	1.37	1.44	1.33	1.17	1.31	1.35	1.48	<b>1.52</b>
	달러/유로	1.2594	1.3556	1.2964	1.2108	1.2123	1.2192	1.2026	<b>1.2129</b>
	엔/달러	107.30	102.56	107.15	110.92	112.50	111.74	113.51	<b>113.82</b>
	두바이(\$/배럴)	27.90	33.11	45.91	52.09	53.79	58.82	56.32	<b>52.71</b>